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자민당의 패배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76년 일본을 방문했을때 농림성 축산국장과 대담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의 축산국장은 실무 책임자라기 보다는 정책입안, 입법활동 등 대국 회로비가 주업무라고 들었다.

일본의 농업문제를 얘기하던 중에 일본의 고미가(高米價)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십년이 지난 지금, 당시 국장이 쌀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서 사료로 사용해야 할 지경인데도 고미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공산화를 막고 보수정당인 자민당정권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EC의 여러 나라들이 분유가 처치곤란할 정도로 재고가 쌓여 있으면서도 농축산물의 가격지정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정국의 안정, 즉 보수정당의 집권을 위한 것이란 보도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고 농민이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며, 국토의 보존이라는 측면 외에도 정국안정의 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농민이다.

현재 우리의 도시문제는 농촌문제를 도시로 옮겨 놓은 것 뿐이며, 일산·분당에 새 도시를

건설할 돈을 농촌에 투자하는 정책을 쓰면 전국토에 고루 잘 살고 도시문제도 해결되리라고 한다.

일본은 이번 참의원 총선에서 보수주의 정당인 자민당이 대패하고 진보적 정당인 사회당이 대승을 하였다. 집권 자민당의 패인은 첫째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고, 둘째는 부가세(물품세)의 실시이며, 셋째는 자민당 지도층의 리크루트사건, 우노수상의 여성관계 등 도덕성결여라고 한다.

12년전 정부의 국장 한 사람의 의견과 오늘의 일본 정부의 정책은 이만큼 변하였고, 농축산업을 너무 쉽고 안이하게 생각한 자민당 정부에게 이번 참의원선거에서의 대패는 큰 경종이 되고 있다.

일본이 농축산물 수입개방, 부가세 신설, 지도층의 도덕성 결여로 정국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이조말의 농촌의 피폐로 동학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의 실패(?)는 나라가 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후 제1공화국도

**최근 쇠고기 저가방출이 소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양돈·낙농육우 등
축산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축산자재(사료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해 왔다.
결국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불가,
향락산업의 번창은 그결과가 어떻게 오리라는 것은
이번 일본의 참의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셈이다.**

농정의 실패로 농가부채 증가가 제1공화국을 막 내리게 한 이유가 되었으며, 5·16후 혁명정부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이 농어촌 고리채 정리가 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결국 공화당 정부도 농정의 실패로 막을 내리고 제5공화국은 소값 파동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축산정책의 실책으로 정권이 흔들거리게 되었다.

국내외에서 농축산정책의 실패는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된다는 역사적 교훈이 계속 되풀이 되지만, 우선 먹기는 곱감이 달다고 농정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최근 쇠고기 저가방출이 소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양돈·낙농육우 등 축산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축산업계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축산자재(사료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해 왔다.

이번 일본의 선거가 우리 축산업계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일본보다는 미국무성 관계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면

서 미국의 일본 시장개방, 특히 쇠고기, 꿀, 쌀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요구한 미국의 노골적 압력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양보 등에 대해 일본의 유권자들이 격분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국내 방송뉴스에도 이번 한·미 외상회담에서 미국측이 미군철수나 8군기지 이전에 합의하면서 이전비용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면서 농축산물수입개방압력 등이 없이 한·미간의 혈맹관계, 전통적 우의관계를 강조한 것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의 확산이나 미국측과 협의없는 북방정책 추진 등이 양국에 유리할 것이 없다고 인식한 때문이라고 한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으며, 다만 우리의 쇠고기 수입량도 변하고는 있으나 물량의 축소가 아닌 확대의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향락산업의 번창은 그 결과가 어떻게 오리라는 것은 이번 일본의 참의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셈이다. 